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2014회...피해보상은 0건

“질병청 내부도 오접종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접종자들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2014회 발생했음에도, 피해 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현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는 지난 9월 27일 기준 2014회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9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332회, 부산 272회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월 27일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수는 총 166건(8.86%)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접종으로 인한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이상반응 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질병청 안에서도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한 건도 없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사례가 1853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6271개소다.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현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이슬기자**

전남, 중증응급환자 치료할 의사 없어 전원을 ‘전국 최다’

3대 중증응급환자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원되는 사례가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5582명 중 541명(9.7%)이 타병원으로 옮겨져 전국에서 전원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전원 환자 중 263명(48.6%)은 치료할 의사가 없는 ‘응급수술 및 처치 불가’ 등의 이유로 조사됐다. 나머지 중증환자는 주소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등의 이유로 전원됐다.

광주는 중증응급환자 8236명 중 352명(4.3%)이 전원됐으며 병실 부족 등의 사유가 9명, 40명은 의료진 부족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응급환자 중 2만6848명이 전원됐으며 병실 부족, 응급수술 불가로 전원하게 된 환자는 6899명(25.7%)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환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만1803명의 환자 중 전원환자는 734명(3.4%)이었으며 병실부족 등의 이유가 163명,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가 116명이다.

서울은 9017명의 중증응급환자 중 546명이 전원됐으며 병실부족(255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주요 진료과 의사가 5명 이하인 곳은 24개 센터 중 과반이 넘는 13개였으며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5개 센터는 20개 진료과 총 37명의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대도시 병원으로 옮겨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정부는 지방 의료 불균형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비기자**



국화 웃음은 부처님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는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을 찾은 시민들이 국화꽃들을 즐기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여수웅천 마린야트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교조 전남지부 제공)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취업전담 교사·취업지원관제 형식적 운영”

“교육계·산업계 협력적 대안 필요”

전남교육청의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업계 고교 학생의 진로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채용 인력이 학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기준 사·도교육청별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 채용 인력이 학교 수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 직업계고 44곳에서 고용한 취

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가 37명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교육부는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산업체 파견형에서 학습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업전담교사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했다”며 “아직도 전담교사나 지원관이 없는 학교와 교육청이 적지 않다는 게 우리 교육현장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잠수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유나기자**

무안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불...7000여만 원 피해

창고 출입구쪽 불길시작

무안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0일 무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5분께 무안군 몽탄면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냉동 창고 1동(396㎡)과 보관 중이던 양파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창고 출입구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